

# 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카드

## [인문]

###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 1번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경제, 세계사, 정치와 법,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저출산, 인구문제, 가족, 결혼, 독신가구, 혼인가구, 조세, 출산장려, 출산지원, 공정성, 개인권리	
예상 소요 시간	문항 1: 70분, 문항 2: 5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자료

문제지와 동일

### 3. 출제 의도

본 논술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 내용과 논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시된 데이터 자료 또는 그림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인하국'이라는 가상의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그 재원을 독신 가구와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간의 차등적 징세를 통해 마련하려는 방안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묻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로서 현대사회의 쟁점일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지원 방법과 조세 징수 방법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결혼·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을, 조세 징수 방법은 독신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 사이의 차등적인 징세와 비차등적인 징세를 상정하였다. 논제에 대한 <제시문>의 논거는 국가가 결혼·출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와 지원 방법의 정당성 여부,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차등적 징세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관한 판단, 결혼·출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 찬반의 논거로 삼도록 하였다. 또 출산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과,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무자녀 독신 가구 간의 차등 징수가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를 인위적인 정책으로 해결 가능한가에 관한 실험자료, 결혼장려금 지급 여부가 출산율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논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 위 논제와 제시문은 『통합사회』, 『사회·문화』, 『문학』, 『세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등 교과서 내용에 준하여 제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모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input type="checkbox"/> <b>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b> ■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input type="checkbox"/> <b>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b>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input type="checkbox"/> <b>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b> <input type="checkbox"/> 사회 ■ 통합사회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 <input type="checkbox"/> 한국지리 <input type="checkbox"/> 세계지리 ■ 세계사 <input type="checkbox"/> 동아시아사		
	<input type="checkbox"/> <b>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b> <input type="checkbox"/>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가)~(다)	성취기준 1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화법과 작문
	(가)~(다)	성취기준 1	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2	4.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
	(가)~(다)	성취기준 1	5.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6.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언어와 매체
	(가)~(다)	성취기준 1	7.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문학
(나)	성취기준 1	8.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나)	성취기준 2	9.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관련 성취기준	2.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다)	성취기준 1	10. [12생윤02-03]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윤리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가족윤리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윤리와 사상
	(가),(나),(다)	성취기준 1	11.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가),(다)	성취기준 2	12.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가)	성취기준 1	13.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나),(다)	성취기준 2	14.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세계사	
(다)	성취기준 1	15. [12세사04-01] 그리스·로마 문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탐구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정치와 법	
(가)	성취기준 1	16. [12정법04-03] 가족 관계(부부,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경제	
(다),(라)	성취기준 1	17.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문화	
(가)	성취기준 1	18.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라)	성취기준 2	19. [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신사고	2020	214-215	공통	○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20	116-133	공통	○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20	205-233	공통	○
국어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20	164-207	공통	○
화법과 작문	이도영 외	창비	2020	160-181	공통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20	112-121, 162-173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20	152-169	공통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71-129	공통	○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40-63	공통	○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90-109	공통	○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20	154-171	공통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20	180-191	(가), (나), (다)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20	168-184	(가), (나), (다)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0	175-193	(가), (나), (다)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04, 263-264	(가), (나), (다)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0	107-108, 265-269	(가), (나), (다)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08-118, 274-279	(가), (나), (다)	○
문학	모경환 외	금성	2020	12-13, 292-293, 306-307	(나)	○
문학	김창원 외	동아	2020	12-13, 274-275, 290-291	(나)	○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20	14-15, 260-261, 282-283	(나)	○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130-138	(가)	○
정치와 법	모경환 외	금성	2020	125-129	(가)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과서	2020	132-137	(가)	○
정치와 법	정필운 외	비상교육	2020	126-131	(가)	○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20	119-123	(다)	○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교육	2020	109-113	(다)	○
세계사	최춘재 외	미래엔	2020	102-107	(다)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71-74	(다)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70-73	(다)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20	71-74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0	74-77	(다)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20	38-39	(다), (라)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20	43-46	(다), (라)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0	41-42	(다), (라)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0	58-65, 188-192	(가), (라)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20	54-60, 177-178	(가), (라)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58-63, 181-183	(가), (라)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0	58-67, 190-192	(가), (라)	○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네 이웃의 식탁	구병모	민음사	2018	전체	(나)	○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역)	한길사	1997	157-170	(마)	○
곰브리치 세계사	에른스트 곰브리치 (박민수 역)	비룡소	2019	132-143	(라)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0	188-192	(라)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20	177-178	(라)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81-183	(라)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0	190-192	(라)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20	38-39	(라)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20	43-46	(라)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0	41-42	(라)	○

**5.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지식은 『통합사회』, 『문학』, 『사회·문화』,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표와 그림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이 택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논제는 인하국이란 가상의 국가에서 고려 중인 차등적 징세를 통한 직접적 결혼·출산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는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를 함께 도출할 수 있는 제시문으로, 결혼 제도의 역사와 국가의 개입에 관한 지문[제시문 (가)],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이 가진 효과와 한계에 대한 지문[제시문 (나)], 로마제국이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법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지문[제시문 (다)]이 제시되었다.

[문항 2]는 제시문 (라)의 <자료 1>부터 <자료 4>에 제시된 표와 그림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인하국 정책의 찬성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와 <자료 4>, 반대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1>과 <자료 3> 중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국가적 지원의 타당성 여부와 가정의 역할, 결혼관의 변화, 개인의 행복추구와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문이다. 먼저 주장에 찬성하는 경우, 가정은 종족보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일차적 사회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개입은 정당하다는 논거를 찾을 수 있다. 반면 반대하는 경우,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로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의 가정이 담당했던 기능도 점차 다른 사회제도나 기관으로 분산되고 있기에 결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거를 들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이 가진 효과와 한계를 다룬 소설을 각색한 지문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해주는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란 국가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 찬성을 택한 경우, 국가의 직접적인 출산장려 지원책이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출산이 어려웠을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여성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적합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정부의 직접적 지원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차등적 징세의 역사적 사례에 관한 내용이다. 로마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한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은 독신에 대한 차등적 징세를 통해 인구증가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번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인하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독신과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라는 점을 들어 인하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자료 1]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을 갖추지 않는 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자료 1-1>을 통해 B집단이 A집단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낮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환경임을 파악해야 한다. <자료 1-2>를 통해 이렇게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의 B집단에서는 출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 증가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이해한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사회적 환경에 투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두 자료의 결과는 인하국 정책에 대한 반대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2]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 출생률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자료 2-1>에서 출생률이 평균 이하인 B, C국은 2자녀 외벌이가구보다 무자녀 독신가구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조세정책을 통해 최근 출생률이 증가한 반면, 출생률이 평균보다 높은 D국은 두 가구 간의 세율 차이를 크게 두지 않음으로써 출생률이 최근 들어 감소함을 읽어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출생률이 낮은 A국의 입장에서는 B, C국과 같은 조세정책을 통해 출생률을 높여야 하며, 이는 인하국의 차등적 징세 정책에 대한 찬성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3]은 생쥐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먹이의 양이 군집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자료 3-1>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먹이의 양이 다소 부족하거나 충분하더라도 군집은 일정 크기까지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며 이후 일정한 크기로 수렴함을 파악할 수 있다. 충분하지 않은 먹이의 양을 충분히 바꾸는 실험공간 B의 실험 결과를 인하국의 직접 지원 정책으로 비유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다. 대조군이 두 개, 실험군이 한 개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개 군의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해석한다.

[자료 4]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그리고 GDP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출산 개입 정책에 찬성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자료 4-1>은 출산율과 GDP 성장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출산율이 높은 국가군에서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료 4-2>는 동일한 자료를 결혼장려금 지급 여부로 재분류한 뒤에, 다시금 출산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하였다. 결혼장려금을 지급한 국가군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숫자가 출산율이 낮은 국가보다 더 많고,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도 출산장려금 미지급 국가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를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출산율이 높아지며,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b>■ 제시문 (가)~(다)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의 정당화</b>			
제시문 (가)~(다)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 (15점)	주장 1(찬성) 선택의 정당화	주장 2(반대) 선택의 정당화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논거: 가정은 재생산을 통한 종족 보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0~5점)</li> <li>- (나)의 논거: 경제적 문제로 출산이 어려운 집단에 직접적 지원책은 효과적임(0~5점)</li> <li>- (다)의 논거: 인구증가가 국가의 경제적·문화적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독신 가구에 대한 차등적 징세가 정당함(0~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논거: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이고, 가족의 주요기능이 국가제도와 다양한 기구로 대체됨(0~5점)</li> <li>- (나)의 논거: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 확충이 결여된 상황에서 직접적 지원책은 효과 없음(0~5점)</li> <li>- (다)의 논거: 국가의 직접적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임(0~5점)</li> </ul>	
글의 논리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5점)</li> </ul>		
<b>■ 제시문 (가)~(다)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한 반론</b>			
제시문 (가)~(다)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15점)	주장 1(찬성)에 대한 반론	주장 2(반대)에 대한 반론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논거: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이고, 가족의 주요기능이 국가제도와 다양한 기구로 대체됨(0~5점)</li> <li>- (나)의 논거: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 확충이 결여된 상황에서 직접적 지원책은 효과 없음(0~5점)</li> <li>- (다)의 논거: 국가의 직접적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임(0~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논거: 가정은 재생산을 통한 종족 보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0~5점)</li> <li>- (나)의 논거: 경제적 문제로 출산이 어려운 집단에 직접적 지원책은 효과적임(0~5점)</li> <li>- (다)의 논거: 인구증가가 국가의 경제적·문화적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독신 가구에 대한 차등적 징세가 정당함(0~5점)</li> </ul>	
글의 논리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5점)</li> </ul>		
<b>■ 반론에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b>			
제시문 (가)~(다)를 활용하여 반론에 대한 재반박 (15점)	주장 1(찬성)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주장 2(반대)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논거 재반박: 국가의 개입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음(0~5점)</li> <li>- (나)의 논거 재반박: 사회적 인프라는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려우므로 단기적인 직접적 지원책도 필요(0~5점)</li> <li>- (다)의 논거 재반박: 차등적 징세더라도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기여하므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0~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의 논거 재반박: 인구 과밀이 초래하는 생태적 위기상황에서 인구 감소가 꼭 문제는 아니며, 미디어의 발전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교류가 가능(0~5점)</li> <li>- (나)의 논거 재반박: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음(0~5점)</li> <li>- (다)의 논거 재반박: 인구증가가 꼭 경제발전을 담보하지 않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적은 인구로도 경제발전이 가능(0~5점)</li> </ul>	
글의 논리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5점)</li> </ul>		
<b>점수</b>			<b>60점</b>

[문항 2]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주장 1(찬성) 선택	주장 2(반대) 선택	
제시문 (라)의 [자료 1]~ [자료 4] 해석	<p>■ [자료 2]의 분석과 해석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2-1&gt; 분석: 가구형태별 세부담률의 차이가 큰 B, C국은 최근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음(0~5점)</li> <li>- &lt;자료 2-1&gt; 분석: 가구형태별 세부담률의 차이가 작은 A, D국은 최근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음(0~5점)</li> <li>- 해석: 자녀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세하는 정책은 A국과 같은 저출산 국가의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음(0~10점)</li> </ul> <p>■ [자료 4]의 분석과 해석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4-1&gt; 분석: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군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많이 나타남(0~5점)</li> <li>- &lt;자료 4-2&gt; 분석: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군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많이 나타남(0~5점)</li> <li>- 해석: 합계출산율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가의 결혼장려금 지급은 출산율과 양의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직접적 지원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함(0~10점)</li> </ul>	<p>■ [자료 1]의 분석과 해석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1-1&gt; 분석: B집단이 A집단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낮으며, 자녀 양육비가 높아 육아에 불리한 사회적 환경임(0~5점)</li> <li>- &lt;자료 1-2&gt; 분석: A집단은 출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늘릴수록 출산율이 올라가는 반면, B집단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0~5점)</li> <li>- 해석: 육아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 지원책은 출산률 제고에 효과 없음(0~10점)</li> </ul> <p>■ [자료 3]의 분석과 해석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자료 3-1&gt; 분석: A와 B를 비교하면, 부족한 음식 양을 중간에 늘리더라도 처음부터 늘려 배급한 경우와 군집 크기의 변화는 비슷하게 나타남(0~5점)</li> <li>- &lt;자료 3-1&gt; 분석: B와 C의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음식을 적게 배급한 경우와 중간에 늘린 경우 간에 개체 수의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남(0~5점)</li> <li>- 해석: 먹이 양의 변화가 군집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인구 조절은 인위적 노력(직접적 지원)으로 이를 수 없음(0~10점)</li> </ul>	40점

※ [문항 1]에서 선택한 주장(찬성 혹은 반대)과 다른 주장(반대 혹은 찬성)을 택하여 [문항 2]를 답한 경우, 0점 처리

감점 요소

<p>[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li> <li>■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li> <li>■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li> </ul>	<p>※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p>																						
<p>[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p>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5">1번</td> <td>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500자 - 69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700자 - 89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900자 - 1,10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1,10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r> <td rowspan="5">2번</td> <td>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340자 - 43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440자 - 53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540자 - 66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66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body> </table>	1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p>(-)10점까지</p>
1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 7. 예시 답안

### '주장 1'을 선택한 경우

####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인하국의 정책에 찬성한다. 먼저 제시문 (가)에 나오듯이 가정은 재생산을 통한 종족 보존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란 점에서 국가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제시문 (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구는 국가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의 토대가 되기에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독신 가구에 대한 차등적 징세도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주택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나)에 나오는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사례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될 경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 나오듯이 결혼은 행복 추구하고 관련된 개인의 권리에기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가 개입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가정이 담당하던 돌봄과 사회화 기능이 다양한 교육기관과 사회기구로 대체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시문 (다)에 나오듯이 국가가 개입하여 독신 가구에 대해 차등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독신 가구나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의 차별로 이어져 공정성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제시문 (나)의 경우처럼 설령 경제적으로 어려운 혼인 가구를 지원하더라도 육아시설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긴다면 인구 감소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의 개입이 꼭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비록 차등적 징세가 차별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계발과 행복추구에 집중하는 독신가구보다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기여하는 혼인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긴 어렵다. 끝으로 사회적 인프라의 경우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미비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원고지 기준 1,057자)

####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인하국의 정책에 찬성하는 자료는 [자료 2]와 [자료 4]이다. <자료 2-1>에 따르면 출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B, C국은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세율을 낮추고 무자녀 독신가구의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출생률이 증가한 반면, 두 가구 간 세율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은 A, D국은 같은 기간 출생률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재 출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저출산 국가인 A국의 경우, B, C국과 같이 가구형태별 세율을 달리하는 차등적 조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 <자료 4-1>에 따르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군에서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이 낮은 국가군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자료 4-2>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을 지급한 국가군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은 반면, 지급하지 않은 국가군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산율과 경제성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러한 출산율은 또 국가의 결혼장려금 지급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를 종합할 때, 자녀 유무에 따른 차등적 징세와 직접적인 결혼·출산 지원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지 기준 603자)

## '주장 2'를 선택한 경우

###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인하국의 정책에 반대한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결혼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형성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가정이 제공하던 자녀의 사회화 기능을 이미 학교 등 다양한 기구들이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 (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독신 가구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특히 독신 여성에게 직접세를 부과했던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법'과 유사해 보이는 인하국 정부의 발상은 공정성과 조세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의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육아라는 돌봄 노동을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과 육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개선 없는 직접 지원만으로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제시문 (가)는 가정은 종족 보존의 최소 단위로 정서적 돌봄과 애착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에, 그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또 (다)와 같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융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강교원네의 경우처럼 출산을 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직접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구과밀이 초래하는 생태적 위기를 고려할 때 인구 감소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디어의 발전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나타남으로써 가정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가 가능해졌다. 또한 인구 증가가 곧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적은 인구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입주했던 가구 중 다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스스로 떠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원고지 기준 998자)

###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자료 1]과 [자료 3]은 인하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료 1-1>에서 B집단은 A집단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고, 고용 안전성이 낮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커 B집단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자료 1-2>에 따르면 A집단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직접적 지원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아졌으나, B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직접적인 출산지원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자료 3-1>은 먹이 양의 변화가 군집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A와 B를 비교하면, 부족한 음식 양을 중간에 늘리더라도 처음부터 늘려 배급한 경우와 군집 크기의 변화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B와 C의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식을 적게 배급한 경우와 중간에 늘린 경우 간에 개체 수의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구 수는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것이지 인위적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 지원으로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히 자녀를 낳아 기르기 적합한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더욱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고지 기준 645자)